

의안 번호	2172	【울산광역시 중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】 <b>심 사 보 고 서</b>
----------	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## 1. 심사경과

- 제출 일자: 2023. 11. 9.(목)
- 제출 자: 김도운 의원 외 9명
- 위원회 회부일자: 2023. 11. 9.(목)
- 위원회 심사일자: 2023. 12. 8.(금)

## 2. 제안설명 요지(김도운 의원)

### 가. 제안이유

-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대한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저출산 극복 및 출산장려를 위해 조례로 정하고자 함

### 나. 주요내용

-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지원기준 및 지원액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지원신청 및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(안 제6조 ~ 제7조)
- 지원제한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
### 다. 근거법규

-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제10조      ○ 「모자보건법」 제3조
-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21조

## 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홍정식)

-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대한 산후조리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
- 제반규정을 검토한 바, 상위법에 저촉 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## 4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# 근거법규

## 「저출산·고령사회 기본법」

- 제10조(경제적 부담의 경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·출산·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·출산·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(이하 “이용권”이라 한다)을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.
-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아동이 「아동복지법」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의 자산형성지원 사업에 따라 개설된 출생아동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할 수 있다.
- ⑤ 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(아동의 친권자·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·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)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이용권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.
-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용권의 지급 대상·방법·시기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「모자보건법」

- 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·증진하기 위한 조사·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## 「건강가정기본법」

- 제21조(가정에 대한 지원)**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.
1. 가족구성원의 정신적·신체적 건강지원
  2.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
  3. 안정된 주거생활
  4. 태아검진 및 출산·양육의 지원
  5. 직장가정의 양립
  6. 음란물·유형가·폭력 등 위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
  7.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
  8.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
  9. 그 밖에 건강한 가정의 기능을 강화·지원할 수 있는 관련 사항
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·출산·수유 및 육아와 관련된 모·부성권 보장을 위한 육아휴직 및 유급휴가시책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, 노인단독가정, 장애인가정, 미혼모가정, 공동생활가정, 자활공동체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. <개정 2007. 10. 17.>
- ⑤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